

2012 건설업계 공생발전을 위한 세미나

기사입력 2012-04-04 19:15:20 |

폰트 + -  

계약제도 개선 필요... 발주처 의지가 중요

“최저가낙찰제는 공생발전 저해... 최고가낙찰제로 전환해야”

건설산업 공생발전의 첫 단추가 ‘발주처’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범 동의대학교 교수는 3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위원회와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가 개최한 ‘2012 건설업계 공생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건설산업 공생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1990년대부터 건설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기업윤리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생발전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요 근거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건설산업 파트너링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부터 오하이오주, 버지니아주 등에서 발주처와 업체, 지역관계자 등으로 파트너링 협의체를 구성해왔고, 영국은 설계와 시공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한 데 이어 업계 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결과 버밍햄 철도 교차로 공사에서만 사고율 0%, 비용 1~2% 절감, 관리비용 50% 절감 등의 성과를 낳았다.

일본 다이세이 건설은 협력사에 대한 지도·컨설팅·업무대행 등을 통한 최적의 기술을 제공한 데 이어 제품개발 공유를 통한 이익을 나누며 업계 간 상생효과를 높이고 있다.

기업의 상생윤리 강화와 함께 계약제도 개선이 공생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교수가 발주처, 일반·전문건설업체, CM감리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건설산업의 공생협력은 모두에게 수혜가 된다는 답변이 45.8%로 가장 높았다.

전문건설업체가 수혜를 본다는 답변도 33.3%로 집계됐다.

‘공생발전을 위해 어느 주체가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7.5%가 발주처(건물주 포함)를, 29.2%가 일반건설사를 꼽았다.

발주처의 공생발전 의지, 즉 윤리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건설과정에서 공생협력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45.8%가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지목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공생협력을 위한 건설하도급 정책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파트너링 표준계약서 도입 △최저가낙찰제의 최고가낙찰제 전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선(절대→상대평가) 등을 제안했다.

유 박사는 “원·하도급 파트너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공유형 계약조건이 필요하다.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파트너링 표준계약서를 마련, 적용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50% 수준의 최저가낙찰제 낙찰률로는 협력사와의 공생발전이 어려운 만큼 최고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용수 중앙대 건설대학원장이 좌장으로 이민영 오피스본종합건설 대표와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유리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사무관,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석희철 롯데건설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